

제주도의 평화 정책과 해군기지 문제

조성윤*

국문 요약

2005년 1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출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방부는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부와 국방부가 군사기지 건설을 밀어붙이자, 제주도지사는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국방부의 대리인이 되어 주민들의 반대 주장을 억누르고, 건설사업을 밀어붙였다.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면서 평화의 섬 정책과 모순되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때로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도 평화의 섬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발언했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경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까지도 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이 계속되었지만, 2010년 들어 해군기지 건설은 확정되었다. 이 대립 속에서 제주도의 평화정책은 대부분 중단 상태이거나 혼란 속에 놓여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제주도가 진행시켜온 평화 관련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정리한 다음,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의 평화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였다.

주제어 : 제주도, 평화정책, 평화의 섬, 해군기지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I. 머리말

한국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2005년이다. 2005년 1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출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제주도는 여러 해 전부터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제주도 안에서의 논의였을 뿐, 전국적인 차원에서 평화의 섬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제주도가 건의한 평화의 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할 일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논의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2005년의 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도가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지만, 그 후속 논의와 조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해왔다. 물론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평화협력과를 신설한 것은 실질적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평화 관련 정책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특히 해군기지 문제로 도민사회가 갈등에 휩싸이면서부터 과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평화 관련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제주도가 군사기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의 섬을 지정할 때 담겨 있던 평화의 섬의 내용 및 조건으로서의 ‘비군사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도 해군과 국방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제주도를 둘러싸고 충돌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제주도 당국은 이러한 정부의 해군기지 설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대립하는 입장에 섰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은 진전을 거듭하여, 2011년에 들어서서는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평화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이 글은 그동안 제주도가 진행시켜온 평화 관련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정리한 다음,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의 평화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II. 평화의 섬 제정 과정과 의미

한국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 당국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공식 지정을 요청한 것 역시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던 제주도내의 학계, 지식인 그룹의 움직임에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동안의 제주도에서의 평화의 섬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평화의 섬 논의를 처음 했던 것은 1991년 제주국제협의회 창립기념 학술회의와 가을 학술대회라고 알려져 있다. '평화와 번영의 제주'라는 주제를 내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그 논의를 묶어 책으로 간행한 바 있다(제주국제협의회, 1993). 그 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지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동아시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들이었다. 여러 차례의 학술회의를 거치면서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평화 관련 논의가 계속되었다(강근형, 1997; 고성준·강근형, 1997). 이러한 움직임은 '제주도에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고, 제주도가 각종 평화 관련 회담의 개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가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이를 제주도 지방정부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정하게 되면 평화도시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생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제주에서 각국 정상들의 만남이 열리면서 제주도가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1991년 제주에서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이 방문해서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담,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총리의 회담이 이어졌고,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회담도 열렸다. 그밖에도 중국 등 각국 정상들의 제주도 방문이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다(고성준·강근형, 1997).

1997년 9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 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평화의 섬 논의는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되었

다. 그 구체적인 조치가 1999년 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제9장)’ 관련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 뒤 2000년 제주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2003년에는 남북 민간교류행사인 ‘남북 민족평화축전’이 열렸다. 이를 통해 제주는 남북한 사이의 ‘회담’과 ‘교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남북 화해를 위한 행사가 제주도에 집중되자, 각국 대통령의 방문 못지않게 제주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까지 덧붙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를 토대로 제주도는 2001년부터 국제 행사인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평화포럼을 만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2001년에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였다.¹⁾ 제주도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홍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왔다. 그러다가 2004년에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제주도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05년 1월 27일 정부가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교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이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국가가 공식 지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평화의 섬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이후 10년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순탄하게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1) 이 센터는 2006년에 건물과 전시실을 완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것은 제주 평화의 섬 논의가 초기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시민들의 제안, 참여, 공감대 형성이 결여된 채 관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출발은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제기를 제주도 내의 언론이 받아 들여 홍보를 했고, 지역 유지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제주도가 나서 정책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유명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국제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했던 것을 제외한다면 시민단체의 참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시기 제주도의 시민단체로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들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분야는 제주도의 개발정책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논의의 초기 과정은 물론 2005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때까지 평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민단체들이 개발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제주도의 평화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독립된 시민단체도 없었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평화 관련 세미나를 전개한다든가, 평화의 섬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적도 없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평화센터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도 2005년 이후였다.

또 한 가지는 1990년대 후반 제주도에서는 4·3특별법 제정운동이 활발했고, 이 움직임이 전국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2000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4·3 때문에 학살당하고, 억눌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새삼 조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많았지만, 이것을 평화 논의로 끌고 가거나, 발전시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평화의 섬 논의를 주도하던 학자들 모두 4·3의 해결 방향과 평화의 섬 논의를 연결하려고 하지 않

왔다는 점이다.²⁾ 이는 아마도 이 시기까지의 제주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의 평화학 연구의 부재, 평화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의 결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제주도 당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평화의 섬」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평화의 섬을 추진한 과정을 정리하면서 대통령들이 제주도를 방문한 이야기만 장황할 뿐, 4·3의 해결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말하자면 제주도 당국도, 이 홈페이지를 작성한 관련 공무원들도 4·3의 해결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는데 얼마 중요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³⁾

말하자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도민들의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지식인 그룹에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 당국이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4·3의 해결하면서 제주도에 평화의 정착이 절실하다는 염원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제주도의 관광 브랜드의 하나로써, 유엔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통해 평화산업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시작한 것이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머리말). 그런 점 때문에 제주도의 평화정책 논의와 평화의 섬은 관변 주도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시작하게 되었다.

2) 이 점에 대한 지적은 제민일보 2000.10.30일자 제민포럼 「평화의 섬」(조성윤)을 볼 것.

3)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볼 것.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제주도가 평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운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세계평화의섬 실천사업과 평화연구소의 예산 및 전문 인력 지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홍보 활동 시 국가이미지로 제주의 평화브랜드를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제주도 당국은 평화의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도청 내에 평화의 섬 추진전담부서인 평화협력과를 설치하여, 제주도민의 평화관련 사업 및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국제적 네트워크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평화실천 사업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협의회는 집행위원회와 5개 분과 위원회를 두고 실천사업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다. 5개의 분과는 평화교류분과, 평화안전분과, 평화환경분과, 평화문화분과, 평화봉사분과이다. 이 협의회는 민간 법인체로 발전할 것을 계획에 넣고 있지만, 현재는 민관협력기구이며, 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가 추진해온 주요 평화사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주국제평화센터와 평화연구원의 건립, 운영
- 제주 평화 포럼 정례 개최
- 4·3문제의 해결과 제주 4·3 평화 공원 설립
-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 평화 대공원 사업
- 제주 Water Park 조성

○ 남북평화네트워크 활동전개

먼저 내용 중에 제주도 당국이 제안한 “제주 Water Park 조성” 사업은 평화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을 지적하자. 그런데도 사업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제주도 당국이 중앙정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는 기회를 이용해서 관련 없는 사업을 그냥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물 이용역사 전시관, 지하수 전시관, 과학관, 물 학습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평화정책으로는 매우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와 평화연구원의 건립, 운영을 보자.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경위와 평화 실천사업,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시하는 전시관이며, 평화연구원은 제주평화의 섬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연구를 담당할 연구원으로 설립되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평화센터는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정책의 얼굴이요, 홍보 센터라고 볼 수 있고, 평화연구원은 싱크 탱크가 된다.

제주국제평화센터장은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평화에 대한 홍보 및 전시교육, 체험학습의 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시스템 기기로 전시실을 만들어 특히 학생여러분들은 꼭 한번은 관람해야할 유익한 학습공간을 만들었으며 세계정상, 노벨평화상 수상자, 연예, 스포츠 스타 31인의 밀랍인형을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길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계속의 "평화의 섬"으로 정착하고 확산하며 동북아 평화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문 바랍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결정체로서 설립되었다고 한다. 설립목적은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다양한 교육활동,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⁴⁾

이상 소개한 것처럼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도의 평화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제주도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평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기구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센터와 연구원은 잘못 설립된, 그리고 제주도의 평화정책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되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기능을 평화의 섬 내용을 홍보하는 기능에 두고 있다. 센터의 중심은 한·소 정상회담 이후 제주도에서 회담을 열었던 전·현직 세계정상들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평화 관련 인권운동가 및 국·내외 스타 밀랍을 제작·전시하는 데 놓여 있다.⁵⁾ 방문객들이

4)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http://www.jpi.or.kr>).

5)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전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갖는 관심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는 편이다.

한편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도에 있기는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원장을 임명하고, 외교통상부의 산하 기구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반면 제주도지사는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그리고 그 활동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제주 사회에서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국제 관계를 토론하고, 관련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연구의 방향 역시 아시아 지역의 외교와 경제 부문의 교류, 그리고 군사적 대결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등 정치외교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뿐, 사회현안과는 거리가 멀다. 제주도의 현안이나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 연구 테마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제주도내의 시민들의 다양한 평화활동이나 평화 관련 시민사회 단체와의 교류 역시 갖고 있지 않으며, 별로 가질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주평화포럼이 있다. 제주평화포럼은 2001년부터 우근민 도지사가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격년제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상징전시실	세계평화의 섬 상징홀
세계평화의 지수	평화지수 모니터, 생각의 계단
제1전시실	제주평화 정신의 배경, 삼무정신, 동북아 중심적 위치, 국제 자유도시 추진 제주의 문화유산, 제주를 방문했던 정상들의 방문기록
제2전시실	세계평화지수, 제주의 평화실천사업, 남·북 교류협력, 한·일 월드컵, 감귤보내기 사업, 제주의 평화실천사업(평화포럼, 국제회의 개최기념)
제3전시실	31분의 극사실 인물 모형 전시<밀랍인형 전시관>

자료 : 제주국제평화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 항목.

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평화정책을 펴나가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애초부터 기획하고 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제주도 당국의 평화정책의 간판으로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2010년 다시 도지사로 복귀한 우근민 도지사는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포럼으로 바꾸고, 규모도 키우고, 질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제민일보 2011.3.9).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그것은 제주평화포럼을 제주를 대표하는,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럼 제주평화포럼의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평화에 관한 내용인가? 물론 평화에 관한 발표들도 있다. 그렇지만 평화에 관한 것들이라도, 민간 차원에서의 평화운동이라든가, 반핵, 반전 관련 이슈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구조, 팩스 아메리카나의 구도 속에서의 국가 단위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 평화 포럼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최근 학계의 중요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들 간의 평화를 테마로 한 진지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제주평화포럼은 제주도의 심각한 현안을 놓고 제주도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토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제주발전연구원, 2002). 올해 5월에 열리는 제6회 제주평화포럼 프로그램 등 실행계획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다(제민일보 2011.3.9). 모두 44개 세션으로 구성되고, 참가 인원도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계획 내용 중에는 제주도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세션이 전혀 없다. 특히 4·3문제와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토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평화 포럼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돈을 쏟아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대통령이나 거물 정치인들과 재벌 회장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참석하는 아주 화려한 세미나, 그래서 이 포럼이 열릴 때면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제주로 몰려오고, 취재 경쟁이 이루어지고, 포럼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축제같은 포럼이 열리는 것을 머리 속에 그리고 개최하는 것이다. 그저 축제를 열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제주평화포럼도 제주도가 돈을 쏟아 부은 축제들 중 하나일 뿐이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으로 제시되었던 4·3문제의 해결과 제주 4·3 평화 공원 설립 사업은 사실은 ‘평화의 섬’ 지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인데, 제주도 당국이 평화의 섬 사업의 하나로 집어넣은 것이다. 그동안 평화공원 사업은 2008년 4월 3일 4·3사료관이 문을 열면서 1단계 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어서 4·3 평화재단이 설립되었으나, 정부가 기금 출연을 미루고 있고, 제주도가 내놓은 사업비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 내용이 대부분 유족 관련 사업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위원회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4·3문제 해결을 위한 더 이상의 사업 진척은 기대하기 어렵다.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사업은 “제주 평화 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모슬포 전적지인 알뜨르 구 일본군 비행장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1930년대에 일본군이 건설한 옛 비행장 터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제1훈련소가 있었고, 지금도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이 때

문에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송악산이라는 관광자원이 있지만, 관광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다만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를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빌려서 경작을 하고 있을 뿐이다(조성윤, 2005: 11).

이 공원은 일본군들이 남겨 놓은 군사시설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평화의 테마로 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유적지로는 대공포진지 4개소, 방공호 2개소, 격납고 20개소, 어뢰정보관소 15개, 지하병커, 4·3 학살터 등이 복원되며, 유도로·활주로·관람 루트 조성 등이 정비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전시관, 기념관, 전쟁체험관, 위령탑, 기념조형물, 교육실, 시청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계획은 애초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보다 늦은 2008년 4월 기본계획안이 나왔으며, 그 내용도 전시관·기념관·전쟁체험관 등을 짓지 않고, 기존 군사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예산도 절반 이하인 48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제주특별자치도, 2008). 그런데 이 사업도 사업부지 문제 때문에 묶여 있다. 사업부지는 이른바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국방부 소유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부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줄곧 부지제공을 거부해 왔다. 그래서 제주도 당국이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수락하면서 대신 이 지역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완전히 제공하지는 않고 해당 지역 일부만 임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도 내려지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남북평화네트워크 활동전개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이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

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해군 기지 설치와 평화 정책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주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해군 기지 설치 문제이다.⁶⁾

최근 해군 기지 설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처음 제주도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공군이였다. 1988년 공군이 제주도 남서쪽 대정 모슬포 지역에 공군 비행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197만 평에 달하는 넓은 땅에 군 비행장을 포함한 군사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방부의 정책에 반발하였다. 가을 내내 반대 운동이 계속되었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의 시민 사회 단체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1988년 12월 이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았다(조성운·문형만, 2000).

그러다가 2002년에 해군이 제주도에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군은 2014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총예산 약 5천억 원을 들여 함정이 계류할 수 있는 7만 평 규모의 항만 시설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에 세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주민들은 곧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제주도내 시민 사회 단체들이 여기 합세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때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는 당선될 경우 백지 상태에서 기지 건설

6)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다룬 연구로는 양길현(2007a, 2007b), 조성운(2008), 이보라(2010), 이경원·김정화(2011)의 글이 있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면서 해군 기지 건설안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화순항 해군기지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 외, 2003).

그런데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2005년 봄부터 해군은 다시 똑같은 계획을 들고 와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다. 8천억 원을 투입해 12만 평 기지를 건설하여 7천5백여 명의 해군이 상주시키고 기동 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함(KDX-3)을 비롯한 함정 20여 척이 계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도민들은 해군 기지 건설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갈렸다. 시민 단체의 연합체인 '제주도해군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해군 기지 건설 추진으로 정부가 선포한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며 반대했지만, 보수 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범도민 유치위원회'는 "해군 기지 건설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안보도 확보될 수 있다"며 맞섰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는데, 결국 화순 주민들은 반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화순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남원면 위미리 개발협의회가 해군 기지를 자기 마을로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반년에 걸친 주민들 간의 논의 끝에 2006년 7월 위미 어촌계는 만장일치로 해군 기지 반대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해군 측은 포기하지 않고 위미 지역 해안이 해군 기지 건설 예정지로 유력하다고 밝히면서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위미 일대를 측량하면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2007년에 들어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대립이 계속되다가,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마지막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2007년 4월 강정동 마을회장과 어촌계의 해녀들 약 백

여 명이 모여 해군 기지 유치를 결정했다. 제주도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화순·위미·강정 세 지역 중에서 강정 지역에서 찬성표가 가장 많았으므로 강정을 해군 기지 후보지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 뒤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대책 위원회가 출범하고, 마을 회장을 해임하고,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다수로 유치 결정을 뒤집었다.

제주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로 제주도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했을 때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농성하다가 경찰에 강제로 연행당하기도 하고, 화순·위미·강정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반대운동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시작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08년 9월 10일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요청했던 광역권 선도 사업으로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원회는 “무늬만 민군복합항으로 당초 군사기지 건설계획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조성윤, 2008). 그 뒤 건설업자들이 선정되고, 강정지역 토지주들과 입어권자인 해녀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사업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10년에는 사업개시가 확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주민 내부에서는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이 갈등은 지역 내부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서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부터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해군기지 건설 추진위원회”가 소수파였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마을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추진위원회

주민들과 손잡고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왔다. 사업개시가 확정 되는 과정에서 결국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손을 잡고 도지사를 불신임하는 주민소환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문제는 제주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10년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우근민 도지사는 선거 당시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해군기지 문제를 향한 중재 해결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해결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고, 2011년 들어서면서 공사를 수주 받은 사업체들에 의해 기초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지사의 입장이나 도의회의 입장이 모두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 한다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반대급부로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간의 문제일 뿐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군기지 설치 계획과 제주도의 평화정책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해군은 21세기 대양 해군 시대에는 화순항 해군 기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고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 기동 함대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함대급 부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제주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는 유인책도 제시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처음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006년 재선되고 나서부터는 해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은 도당국이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앙 정부로부터 평화의 섬 지정을 받는데 노력했고, 평화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하

겠다고 했던 도지사가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나아가 적극 유치하는 활동을 편 이유는 무엇일까 ?

제주도 당국이 민간이 추진하던 '평화의 섬' 방안을 받아들여, 제주도 핵심 사업의 하나로 만들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그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5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을 받고, 이미 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평화연구원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만한 굵직한 사업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 이후로는 제주도 당국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평화정책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활동을 해야 할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던 같은 시기에 해군기지를 다시 제주도에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5년 1월 평화의 섬 지정을 건의한 제주도 당국과 이를 승인한 정부 당국 모두 해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평화의 섬을 지정하는 것과 상호 모순을 일으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제주도지사는 물론 정부당국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군사기지와 평화의 섬 추진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와이와 오키나와에도 군사기지가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더라도 얼마든지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평화의 섬 추진 계획을 지지하는 운동을 펴왔던 학자들 중에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가 '평화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성준·강근형, 1997). 평화지대란 적어도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서거나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제 조건이며,

그것이 충족되고, 그 위에서 다양한 평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상당한 성과가 쌓일 때, 비로소 국제적으로 평화의 섬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하와이와 오키나와에도 군사기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전에 설치된 것으로 즉각 철수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한 기지 반대운동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이제 새로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앞의 두 경우와는 전혀 사정이 다른 것이다.

만약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곧 이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공군기지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한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름난 군사 요충지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을 계속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해 줄까? 의문은 계속해서 생겨난다.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당국의 평화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다. 물론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평화연구원이 설립되었지만, 이것은 대부분 국비에 의한 것이고, 제주도 당국이 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제시하기로 했던 구체적인 평화 관련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제주평화연구원이 해군기지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2007년 10월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진단 용역 중간보고 내용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신설했던 '평화협력과'를 폐지하고, 평화정책계, 평화시설계, 교류협력계 등 3개 계로 이뤄진 평화협력과를 4·3사업소 산하의 1개 계로 통폐합해 '4·3평화사업소'로 개칭하도록 하였다. 이 발표가 나오자, 관련 단체들은 '세계평화의 섬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 결정의 철회

를 촉구했다(제주의소리 2007.10.21). 물론 이러한 여론에 따라 평화협력과는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평화협력과에 맡겨진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평화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평화의 섬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주도하기로 예정하고 구성했던 기구는 '제주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였다. 제주도 당국은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범도민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기구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평화협력과가 이 위원회를 앞세워 몇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기는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년 동안의 평화사업 성과를

-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제주평화포럼 개최, 4·3평화공원 조성, 4·3유적지 복원사업,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설립, 환태평양평화소공원 조성
- 평화아카데미 운영, 제주평화헌장 제정, 평화봉사단 운영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6회 제주포럼”의 성공적 개최
- 유니타르(UNITAR) 제주 국제훈련센터 운영, 제2회 아시아 청소년 포럼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랍인형모형 제작 전시
- 제주평화연구원,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평화환경, 평화봉사, 평화문화, 평화안전, 평화교류 등 다양한 평화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하고, 사업계획
- 평화의 섬 지정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제6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 사전거 평화대행진(5.28~5.29)
- 평화의 섬 국제마라톤 대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백일장, 평화그림 그리기
- 어머니가 만드는 평화이야기
- 남북협력 공동세미나7)

위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사업들은 나름대로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평화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해군기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주도 당국의 평화정책은 끊임없는 혼란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맺는말

적어도 형식적으로 보면, 21세기 제주도가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는 '평화의 섬 제주'이다. 아무리 감귤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이 대외적으로 내걸 가장 떳떳한 주장과 미래의 전망은 '4·3의 아픔을 뛰어 넘어 평화로운 제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제주도의 지식인 그룹이 앞서가면서 평화의 섬 지정 방안을 제시했고, 제주도 당국은 이를 제주도의 브랜드로 인정하고, 정부에게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

7) 세계평화의 섬 지정 6주년 성과와 향후계획(작성일 2011.1.28),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홈페이지(<http://www.jeu.go.kr/contents/depert.php?silkuk=11&depart=38>).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너무나 쉽게 제주도가 요청한 대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제주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02년에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다. 정부와 국방부가 군사기지 건설을 밀어붙이자, 제주도지사는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국방부의 대리인이 되어 주민들의 반대 주장을 억누르고, 건설 사업을 밀어붙였다. 왜 제주도지사가 이런 태도를 취했는지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내의 건설토건사업을 하고 있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유착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앞으로 좀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면서 평화의 섬 정책과 모순되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때로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도 평화의 섬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발언했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경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까지도 폈다. 해군기지는 대규모의 토목건설 사업을 가져올 것이고, 그 경제적 이득이 평화의 섬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머나먼 길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지도 모른다. 해군기지 설치 계획을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 이득이 과연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제주도는 '평화의 섬'에서 '군사요충지'로 바꾸어 놓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도록 협조하는 대신에 알뜨르 일대의 국방부 소유 부지를 양도받는 것을 이면 조건으로

하는 계역을 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땅을 양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곳에 멋진 평화대공원을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그 공원을 과연 평화 공원이라고 부르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들어 평화교육을 받는 대표적인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제주도민들은 일본군의 옥쇄 작전으로 몰살당할 뻔했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 4·3 기간 동안에는 한국군에 의해 수많은 양민이 대량 학살당했고, 수십 년 동안 숨죽이고 살며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운동을 통해 조금씩 아픈 상처를 치유해왔다. 특히 '평화의 섬' 지정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주체가 된 평화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 가운데 나온 해군기지 설치계획은 제주도의 평화 지대로 변화하려던 노력을 싹부터 눌러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이 한동안 밀고 나가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고 손을 놓아버린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주도민들은 조금씩 평화 운동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국방부가 경제 논리를 내세우면서 제주도민들을 설득하려 한 반면, 도민들은 그동안 주민 운동이 드러냈던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태도를 넘어서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 해 계속되고 있는 강정 주민들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운동은 이제 자신의 마을을 지키고, 제주도를 지키는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평화 운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이들로부터 제주도 평화 운동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문헌

- 강근형, 1997, 제주 '평화의 섬'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구축전략, 東아시아 研究論叢 제8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363-376.
- 고성준·강근형, 1997,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東아시아 研究論叢, 제8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181-222.
- 양길현, 2007a, 제주 평화의 섬과 화순항 해군기지, 평화번영의 제주정치, 으뜸.
- _____, 2007b, 화순항 해군기지 논쟁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평화번영의 제주정치, 으뜸.
- 이경원·김정화, 2011,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 경제와 사회, 통권 제89호, 한국산업사회학회, 298-332.
- 이보라, 2010, 제주도 내 '군사기지 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만들기의 정치학, 제주도연구, 제33집, 제주학회, 131-180.
- 제주국제협의회, 1993, 평화와 번영의 제주, 신라출판사.
- 제주발전연구원, 2002, 21세기 세계평화의 재검토와 평화의 확산.
- 제주특별자치도, 2008,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 2006, 제주해군기지원영향분석 결과보고서.
- 조성윤, 2005, 지역 주민 운동의 논리와 근대화 이데올로기: 제주도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제29권 4호 통권 97호 2005 겨울호, 9-30.
- _____, 2008, 고난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역사비평, 82호, 봄호, 역사비평사, 188-213.
- _____. 문형만, 2000, 제주 모슬포지역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사회발전연구, 제16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9-42.
- 화순항 해군기지방대 안덕면 대책위원회 외, 2003,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백서.
- 제민일보, 2000.10.30. 제민포럼, 평화의 섬(조성윤).
- 제민일보, 2011.3.9. 세계평화포럼, 세계로 도약한다.
- 제주의 소리, 2007.10.21. 조직개편안, 세계평화의 섬 후퇴시키는 결정.

濟州島研究 35집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홈페이지, <http://www.jeju.go.kr/contents/depart.php?silkuk=11&depart=38>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pi.or.kr>

Abstract

The Peace Policy of Jeju Province and the Problem of Naval Base

Cho, Sung-Youn*

January 27, 2005, President Roh Moo-hyun at Chung Wa Dae assigned Jeju island as "Island of World by signing a declaration specifying a peaceful island of Cheju.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onstruction plan of military bases on the island had been pushing by navy and central government. When the central government pushed the construction plan of military bases, the Governor of Jeju agree with that construction plan on thje spot. He had became an agent of the government and did not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ey had pushed construction projects.

Dur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Governor of Jeju pushed the construction plan of military bases, They did not realize the contradiction between peace policy and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They explain that there is no contradiction of the coexistence between two and insist on so far as to help improve Jeju economy, In spite of the anti-construction movement of the Naval Base had continued by residents and NGO groups, the construction plan of Jeju naval base for 2010 was finalized. In this chaos, most of the items of the peace policies lies halted.

In this paper, I want to argue the peace-related projects in Jeju Province and review the contents and cleaned up its meaning. And I want to clarify

* Jeju National University

濟州島研究 35집

the influence the problem of Jeju naval base to the direction of the peace policy.

Key Words : Jeju island, peace policy, Peace Island, Naval Base

논문투고일 2010. 12. 22.

심사완료일 2011. 1. 25.

게재확정일 2011. 2. 5.